

# 민주당 불공정 공천 논란 '폭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천심사 이의제기 기자회견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의원 하위 10%' 평가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공관위가

## 박용진 이의 신청 기각 민주당 필패 지적 나와

평가 결과를 통보받자 이의를 제기하며 21일 재심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82건의 법안 대표 발의, 상임위원회 95%, 본회의 90%의 출석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22일 오후 1시에 중앙당 공관위 지원팀으로부터 재심 신청 기각 문자를 받았다.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됐기에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박 의원이 받은 문자는 구체적으로 '공관위원회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라며 서술했다.

특히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경선에 참여하실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30% 감산이 적용됩니다'라고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누가 결정한 건가 (지원팀에게) 질문하러 공관위원장이 시켜서 보냈다는 답을 들었다"며 "개인이 독단적으로 했다면 임혁백 위원장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임혁백 위원장은 당의 공식 기구인 공천관리위원장이자, 그리고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의 재심 위원장이시기도 하다"며 "당헌·당규에는 그 기각을 공관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다. 공천관

리위원회 재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뭔가 무서워서 학생에게 자기 시험지와 성적표를 못 보게 하고 숨기는가"라고 한탄했다.

비밀계 의원들은 전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 '현역의원 평가 세부 내역'과 '현역의원 제외 여론조사'의 진상 공개를 요구했다. 또 '민주당이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진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수차례 나왔다고 한다.

이재명 당대표의 불참 속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관위에 (현역의원 하위 평가)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위원장님께서 직접 어떻게 평가를 진행했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하루 만에 박용진 의원이 이 같은 문자를 받아 불공정 공천 의혹 해소는 물 건너 간 셈이다.

관련해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당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헌·당규와 공천시스템에 따라 합당한 인물들을 잘 공천하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의뢰인 불분명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필요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가 있을 텐데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저는 이게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의 조사"라며 "이걸 과도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정윤 기자



국민의힘 고양정 시도의원들은 22일 고양정 김현아 후보의 단수공천 결정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승철 기자)

## 단수공천 보류 김현아 '반발'

### "악의적인 음해로 시작 본선 경쟁력 약화 우려"

국민의힘 고양정 시도의원들은 제 22대 총선 고양정 김현아 후보의 단수공천 결정 보류를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심홍순 경기도의원 등 시도의원 7명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아 후보 공천 보류 이유로 당이 제시한 검찰 수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동분투 사건 당시 물타기를 위해 정치편향된 언론사의 보도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 공천이 보류된다면 국민의힘 특정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로 인해 본선 경쟁

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도시계획·주거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국회의원으로로서 필요한 유능한 능력과 자질을 이미 검증한 후보라며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여·야 정치인 최초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제1기 신도시 일산 정비사업의 교두보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양정이 12년간 민주당에 3연패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본선 경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당에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이기는 공천, 즉 김현아 후보의 공천 결정을 즉각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철 기자

## 남부권 소각장 현대화사업 관련 간담회

### 장성숙 인천시의회 의원 송도소각장 증설 의견 수렴

송도소각장 증설 등 남부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의 입장과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송도광역소각장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인천시의회 장성숙(민·비례) 의원을 비롯해 박한준 대책위 상임대표, 이정석 인천교육청(송도)시민소통참여단장, 안길남 송도센트럴파크Ⅱ 노인회장, 정갑수 참살미술허관 명예관장, 기형서 연수구의회 의원, 박광은 송도국제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 노광주 센트럴파크삼 입주자대표, 송도3동 주민 권영민 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부권 현대화 사업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인천시의회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진행을 맡은 이날 간담회는 최명환 시 자원순환과장 등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 추진 사항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 질의응답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장 의원은 "인천시는 대책위 의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진행 사항을 공유하기 바란다"며 송도 주민의 의견을 대 표하는 대책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한준 상임대표는 "남부권 현대화 사업도 560톤 증설을 전제로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확화 발표는 군·구로 책임을 돌리고 있고,

오는 2026년까지 처리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압박 수단으로 타 군·구 생활폐기물 반입을 차로 막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길남 노인회장은 "2배가 아닌 수십배 증설적 반입 부담을 시켜야 각 시·군·구에서 쓰레기 발생지에서 소각장 시설을 건축할 것"이라며 "각 시·군·구에서 소각장 설치할 때까지 광역소각장에 반입 문제는 2배 이상 반입 부담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조건 하에 반입하도록 하고, 송도 현대화 소각장 시설 설치하는 각 시·군·구 소각장 설치 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갑수 명예관장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폭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에 최명환 과장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 "능장 선거구 획정, 피해자는 유권자"

## 진보당 경기도당 논평 "유권자 주권 질 하락"

진보당 경기도당이 22일 늦어지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합의와 관련해 국회를 비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선거일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 선거구 획정이 미정"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안을 내놔지만 국회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여야는 속히 획정안에 합의안을 제출하라"

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능장이 반복되는 획정 다툼은 이제 한국 정치의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다"며 "총선·지선 가리지 않고 당리에 따라 이리 저리 저리 붙이다 막바지거나 '타협' 간판을 달고 수정안이 공개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것은 알 권리 침해로서 그 결과 투표로 이뤄지는 유권자의 주권 행사 질이 하락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발표한 '지역선거구 획정 결과'에서 분구·

통합 등 조정 지역으로 제안된 경기도 선거구들을 예시로 들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에선 획정위의 조정 지역인 하남·평택·화성·부천·안산 등의 유권자들이 끝없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은 획정위가 오랜 시간 숙고한 원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애초 선거 제도에 민의 왜곡이란 맹점이 도드라지니 선거구 갈등도 늘 난항"이라며 "선거구 개편이나 비례

및 의석 확대 모두 한 자루에 든 중대한 과제이기에 진보당은 전부터 대안으로 대선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22대 국회는 선거 제도부터 칼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획정위가 마감일도 제시한 21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가 총선 1년 전 모든 지역구를 획정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도 8개월이 지났다.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인창 기자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설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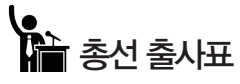
### 인천시선관위, 오는 26일부터 지역 7개 구 선관위에서 진행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

두고 7개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예정자·선거사무관계자·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6일 서구선관위가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계속되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자격에 관한 사항 △후보자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후보자 등록운동방법 및 제한·금지사항에 관한 사항 △정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종삼 기자



충청 출사표

## 제설 선거캠페인 '구슬땀'

### 유제홍 예비후보

국민의힘 유제홍(사진)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을 때까지 제설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 밤 폭설로 인한 출근길 혼잡이 컸다"며 "공공기관에서 열심히 제설 활동을 하고 있으나 구석구석 닿기 어려운 상태"라고 제설 캠페인을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선거도 좋은 정치인을 선출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 중이라고 시민의 불편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 통행로, 좁은 골목, 경사진 언덕길 등 시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부터 먼저 진행하겠다"며 "제설이 안된 언덕길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돼 시민의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 제설 캠페인을 최대한 진행하고 제설을 요청하는 지역이 있다면 달려가 바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우리 인천 지역의 다른 후보들도 함께 시민의 불편을 덜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성호 기자

## 지지대공원 일대 휴식공간 조성

### 김현준 예비후보

김현준(사진) 수원갑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파장동 지지대공원 일대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전면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지대공원 일대는 효행공원과 파장저수지 등 장안구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이 자리잡고 있으나 접근성이 열악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파장저수지는 장안구 일대에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사용돼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돼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지대공원내에는 프랑스군 참전비, 어린이미술체험관 등이



위치하나 원형지 상태로 방치중인 구역도 다수 있어 대대적인 정비를 통한 활용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공원내에 시설물을 확충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지대공원내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마련하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열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재판 '엄중한 판결'

### 염태영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사진)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2일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일가족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엄중한 판결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염 예비후보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광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피해자 등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가구주택 관련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세사기 범죄는 서민과 대학생·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대부분 20·30대 청년들



이 희생당한 전형적인 '사회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염 예비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수면 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불안감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할 것"이라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20·30대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상대로 전 재산을 빼앗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열 기자